

고속도로 확장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도 서둘러야



영호남 상생·균형발전 위해 철로 뚫어 물적교류 확대

광주~대구 고속도로 4차로 개통과 더불어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영호남의 진정한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잇고 철도를 뚫어 동서 간 통행로를 다변화하고 넓혀 물리적 거리부터 좁히는 것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륙의 동서를 가르는 광주~대구 간 철도 건설 사업은 광주와 대구, 양 시도가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지난 2006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을 통해 의견이 제시됐었다.

동서 물류 수송을 위해서는 동서횡단 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어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대상사업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광주~대구 내륙철도'는 광주~담양읍~순창읍~남원시~함양읍~거창읍~고령읍~대구 달성군에 이르는 191km를 단선 전철로 신설하며, 사업기간은 9년이 소요된다. 총 사업비는 4조 8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적인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발전연구원 장하옥·한경록 박사도 지난 2013년 연구보고 발표를 통해 "광주~대구 내륙철도 예상 노선의 경

유 지역 주변 인구는 219만 가구에 577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철도 네트워크 확대, 수송 효율성 제고,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촉진의 3가지 측면에서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기 검토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지지부진해졌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 협력 사업으로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포함시켜 정부에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양 시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이 사업이 빨리 가시화되도록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양 시도가 우선 제3차 정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 지역민과 정치권, 경제계 등도 영호남의 역량을 결집해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노력도 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대구 내륙철도 사업은 경제성 및 수요 논리에서 벗어나 동서화합,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광주시와 대구시도 이를 '달빛동맹' 현안사업으로 보고 정부에 지속적인 조기 건설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 이슬촌 '행복드림 크리스마스' 23일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 행복드림 크리스마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오색등으로 장식된 축제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슬촌 크리스마스 축제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탈당 바람 북상...수도권 가면 '태풍'

임내현 새정치 탈당 선언 "안철수 신당과 함께 정권교체 하겠다"

전남 박지원·주승용 막판 고심... 서울 김한길 탈당땀 분당 현실화

호남에서 시작된 탈당 바람이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조기 선대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분당의 위기를 극복할지는 미지수다.

23일 광주의 임내현 의원(복 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다. 임내현 의원은 이날 "호남과 중도세력을 품지 않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

다"며 "안철수 신당과 함께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까지 의견을 넓힘으로써 정권교체라는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김동철, 임내현 의원의 탈당에 이어 장병완, 권은희, 박해자 의원의 탈당도 사실상 조망기에 들어간 상황이며 새정치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 민심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주

승용 전 수석 최고위원의 결단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어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조만간 탈당의 태풍이 몰아칠 분위기다.

특히, 호남에서 불고 있는 탈당 바람은 수도권으로 북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분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지난 20일 문 대표에게 살신성인 결단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이어 최근에는 탈당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 전 대표가 탈당한다면 이종걸 원내대표와 노웅래, 정성호, 최재천, 최원식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분당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조기 선대위' 카드를 던지며 탈당 바람 차단에 나섰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한 총선 승리를 위해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혁신을 지키고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대표직에 아무 미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때늦은 제안'이라며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조기 선대위 카드가 분당의 위기를 수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해야" 판결

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

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가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

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씨는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냈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반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와 함께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초등교사 광주 과열 전남 미달 ▶ 7면
 블루오션 다도해 - 신안 도초 ▶ 18면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촉촉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HERA OIL SERUM MAGIC FORMULA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